

정보 및 정보기술의 상업화에 따른 정보유통의 불균형

이 순 재)

< 목 차 >

- | | |
|---------------------|-----------------------|
| I. 서 론 | III.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
| II. 정보화 사회와 정보기술 | 1. 커뮤니케이션 정책 |
| 1. 정보산업의 발전 | 2. 정보의 공공적 가치성 회복 |
| 2. 정보기술의 사회적 합의 | IV. 결 론 |
| 3. 정보, 상업주의 그리고 상품화 | |
| 4. 정보의 불평등, 불균형 | |

I.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매스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발전론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자유무역주의의 한 변형으로서 '자유로운 정보 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을 정책의 중심위치로 올려 놓음으로써 서방세계가 미디어를 대량수출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을 창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 저발전국가들은 2차 대전 후 4반세기 동안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자유로운 정보유통' 원칙에 비판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자유롭고도 균형된 정보유통'(free and balanced flow of information)을 요구해 왔다.²⁾

1) 동래여자전문대학 도서관과 조교수.

2) 1970년대에 제3세계권에서 대등한 주권과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면서 제기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으로 인한 기술적 능력의 증대가 곧 제3세계 저발전국의 발전을 초래한다는 발전론자들의 주장은 다분히 기술결정론적이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기술적 가능성에만 주목하고 있는 낙관론자들은 정보기술이 정보획득의 용이함과 정보불평등의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판적이면서 경험수준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과 그를 바탕으로 제기된 정책건의에 정면도전해 왔다. 이들은 후진국 근대화의 실패가 부분적으로 미디어 제국주의와 그것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국가와 다국적 기업을 통하여 기인되었으며, 그 반사이익을 그들이 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진국에 대한 제3세계의 종속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그 실용성과 효율성이 실제로 증명되면서 전체발전의 핵심적인 차원의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정보화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연 정보화가 국가발전의 선진화를 반드시 약속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인가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윤추구를 위한 응용, 정보의 상품화와 사유화 등은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서비스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의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발전을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들을 고려할 때,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은 상업화와 사유화 과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체계들의 한계와 구속을 규명해 줄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통제와 권력 양상의 이해와 실제적인 미래제시, 정보가 기본 자원이 될 때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에 대한 변화유무의 연구조사, 더욱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과정에 진정한 다양성과 공중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모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와같은 관점에서 한국의 정보산업의 발전과정과 정보기술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정리하고, 또한 정보의 상품화와 그로

신국제 정보질서(New World Information Order)는 제3세계의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정보질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의 문제,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등을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한국의 문헌정보학(도서관)과 그 이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과도 매우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내포하는 바, 이와 같은 학문의 외연적 상황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 발전방향과 장래전망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II. 정보화 사회와 정보기술

1. 정보산업의 발전

정보산업은 정보의 가공, 처리, 저장, 유통, 전송,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산업이며, 그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활동과 관련된 산업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보산업에 대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분류체계가 없이 매우 다양하다.³⁾

그런데 정보산업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행된 정보행위 보다는 새로운 기술 특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다음 [그림1]과 같이 정보산업(광의의)을 분류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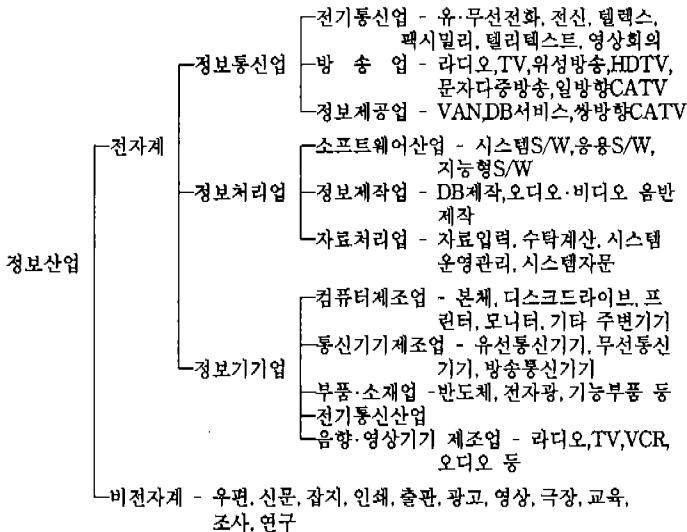
이와같은 정보 산업은 산업사회(공업화사회)에서 공산품이 주요한 자원이듯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므로 이러한 정보자원을 정보산업이 제공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정보유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창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나아가 전산

3) 김휘석, 조윤애, 정보산업의 장기비전 - 정책과제와 대응,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71호, 1989. 7, p.33.

4) 김영관, 조신,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구조분석, 통신개발연구원, 1990. 12, pp. 39-43(신용식 외, 정보사회론(서울: 데이콤 출판부, 1992), p.114에서 재인용).

업의 네트워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보산업은 국가사회의 기반구조로서 금융, 운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가 큰 전략 산업이다.⁵⁾ 91년도 「컴퓨터 연감」에 따르면 세계 정보산업 시장은 고도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연평균 20%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조기실현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미국, 일본, EC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이 자국시장의 보호책 마련 및 해외시장 개척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보관련산업은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정부를 중심으로 정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리하는



[그림 1] 정보산업의 분류

5) 신윤식 외, 상계서, p.661.

등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⁶⁾

정보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국은 국가주도, 수출중심의 경제발전을 세계체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의 주변부적 특질로 성격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한국 경제구조의 이와같은 주변부적 특질이 전자통신공업의 발전과정에도 연장되어 있음은 물론이다.⁷⁾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관건인 기술이전에서 전자공업의 기술도입선은 미일 양국에 편중되어 기술 공급국의 독점적 지위 부여, 도입국의 종속적 위치의 강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산업의 독점화 과정과 관련하여 강명구⁸⁾는 통신시설과 서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국가기구의 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고 있다. 국가독점의 근거는 통신을 통한 공공 서비스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과 통신이 여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Bell의 자연독점 붕괴, 영국 British Telecom의 민영화, 일본 NTT의 민영화 추진 등 선발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개방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경향은 한국 정부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어, 정부 역시 통신공사의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영화 정책의 검토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국가

- 6) 상계서, 동면.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정보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들은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과학기술처의 기초과학 연구사업, 한국통신의 정보통신 사업의 집중투자, 체신부의 정보통신 진흥자금 조성, 상공부의 지역 정보화 연구, 전자정보 연구소의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업계도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선진업체와의 협력강화, 해외 현지개발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상환은 해가 거듭될수록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상계서, p.663)
- 7) 강명구, "정보통신산업의 주변부적 특성과 정보의 불평등 구조," 크리스찬 아카데미, 매체 - 커뮤니케이션의 단절과 회복(서울:우석, 1989), pp.252-256.
· 한국의 사회성격 논쟁과 관련하여 생산관계(노사관계), 국가, 다국적 기업(혹은 제국주의적 침투) 등의 핵심적 요소들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주변부 자본주의론, 신식민주의론의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 8) 상계논문, pp.259-260.

통신망 건설과 정책 입안의 주체, 통신망 서비스의 목적 등이 소수의 대재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발전과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⁹⁾

첫째,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해외 자본의 대량유입과 수출신장에 힘입어 1971년 이래 연 34%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져서(1983년 6.5%), 한국경제의 발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1970년대 제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정보통신산업은 국내적으로 민간 독점자본의 형성과 자본 및 기술의 해외의존 심화를 통해 미일을 축으로 삼각무역체제의 한 고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미관계에서 신흥공업국가적 위치, 대일관계에서 종속적 위치, 대중동 및 동남아 관계에서 준제국주의적 위치는 자립화한 민족적 국민경제의 건설이라는 당면과제에 비추어, 전자통신산업 발전의 길이 대단히 협소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이러한 대외의존이 심화된 경제구조는 정보통신산업의 자본과 기술이전에 그대로 연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1983년 이후 개발된 직접,간접 투자된 해외자본의 80% 이상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이라는 점과 1962년부터 1983년까지 이루어진 기술이전의 90% 이상이 미일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내적으로 생산된 잉여의 누출 메카니즘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예증해 주는 것이다.

2. 정보기술의 사회적 함의

테크놀로지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시각은 이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접근방법 내지 시각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상이한 이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양자간의 관계를 인과관계(causality)로 볼 때 그 인과관계는 크게 1)기계론적 개념의 인과관계(mechanistic

9) 상계논문, p.260.

conceptions of causality), 2)표현적 인과관계(expressive causality), 3)구조적 인과관계(structural causality)등 세가지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술 그 자체가 사회발전에 일관성 있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의 발전이 기술의 영향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래 매스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발전론자들의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이 관점은 전자매체의 확산을 도시화, 정치참여의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대화와 연결시킨다.¹¹⁾ 그러나 지배적인 시각들을 부정하는 패러다임과 그 비판적 연구에의 안목제시를 위해 다음의 내용들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 동안 정보사회의 예측들은 사회의 구체적 조건과는 별개로 기술적 측면 혹은 정보기술이 지닌 기술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 사회적 함의를 논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사회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생산과정, 유통구조, 수용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겠다.

10) 이강수 외, "정보화 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언론학보, 제8집(1987), pp. 32-45.

· '기계론적 개념의 인과관계'는 원인과 효과가 본래적이든가 아니면 사회적 세력과 상호작용의 단순한 결과로 보며, 원인과 효과의 분리로서 특정지을 수 있다. 즉 원인이 생기면 필연적으로(본래적으로) 특정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술의 효율성만으로는 특정효과를 야기시키는 데 결코 충분한 조건이 못된다는 점과 테크놀로지란 원천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체계속으로 들어와서 체계내의 사회적 세력과 접촉하게 됨에 따라 체계속에서 효과적인 세력이 된다는 주장들에 비판을 받고 있다. '표현적 인과관계'는 원인과 효과로서의 테크놀로지를 사회와 연관시켜 그 사회속에서 테크놀로지가 생성되고 효율성을 촉진시키며, 테크놀로지는 유리된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총체로서 사회에 통합되는 것이라 한다. 이는 사회적 총체에 관한 특정 시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보는 테크놀로지는 특정 사회구조의 어떤 중심적 핵심을 표현하는 현상인 것이다. '구조적 인과관계'는 원인은 그것의 효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며 효율성을 행사하는 그 구조는 효과를 구성한다고 본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사회구조의 한 부분으로 보며 그 사회구조내에서 테크놀로지가 출현하고 효율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어떤 중심적인 핵심의 주변적 표현이거나 혹은 사회의 원리를 조직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사회를 어떤 종류의 전체 혹은 총체로 가정하되 표현적 총체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현적 인과관계와 구별된다.

11) 박홍수, 김영석 공편, 뉴미디어와 정보사회(서울 : 나남, 1987), p.147.

먼저 생산과정¹²⁾이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기술을 만들어 내느냐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정보 및 정보기술의 상품화'라는 경향이 바로 생산과정을 특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또 하나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 노동과정에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와 노동과정의 통제를 위해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또한 누가 왜 정보기술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문제의 핵심적 부분이다.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본질적으로 확대 재생산이며 따라서 자본가는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로 부터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여 잉여가치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것은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강화 또는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은 노동자들의 저항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노동수단이나 노동방식의 개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잉여가치율을 유지하고자 한다.¹³⁾

결국 자본주의에서의 기술은 자본주의에서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자본축적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산물이며, 특히 기술혁신을 통해 획득되는 잉여가치 - 기술적 지대¹⁴⁾(technological rent) - 를 높이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¹⁵⁾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생산과정으로의 도입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논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생산성의 증대를 위해 복잡한 대량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고도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생산과 경영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은 노동통제에 있어서 그 이전의 어떠한 기술보다도 더 큰 잠

12) 강명구, 전개논문, p.261.

13) 최두진,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성격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미간본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p.27.

14) 기술적 지대란 기술적 과정을 독점함으로써, 즉 상품의 비용가격을 저렴화시키는 제발견 및 제발명으로 부터 창출되는 잉여이윤인데, 그것은 진입애로, 소규모의 투자수준, 특허권 통제, 카르텔 협정 등과 같은 독점자본 그 자체의 구조로 인하여 일정한 생산분야에서 널리 일반화될 수도 없고 모든 경쟁자에 의해 적용될 수도 없다.(E. Mandel, 이범구 역, 후기자본주의 (서울 : 한마당, 1985), p.188)

15) 최두진, 전개논문, p.28.

재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생산력으로서, 한편으로는 보다 정교한 노동통제 수단으로서 자본주의체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획득해가고 있다.¹⁶⁾

다음으로 유통구조는 생산된 정보가 어떤 정보통신망(위성통신, 해저케이블, 전화망, 컴퓨터망 등)을 통해 소비자 부문에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다. 전세계적 통신망을 소유한 국가간의 힘의 관계, 초국가 기업과 주변부 독점기업과의 관계, 통신망의 설치와 정보 규율을 규제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¹⁷⁾

정보과학의 기술 발전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의 생산, 유통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보통신망의 사회적 사용형태등이 시장논리에 편입됨으로써 정보의 공적 영역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민주적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과정이란 정보기술이 사회적으로 사용될 때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사용되며,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 가져다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며, 사회적 사용에 대한 정책결정의 문제도 수용과정과 깊이 관련된다.¹⁸⁾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정보, 상업주의 그리고 상품화

정보 사용 경제에 있어, 그 자체가 다른 모든 부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영향을 끼치는 팔목할 만한 발전이 있다. 그것은 판매용 상품으로서의 정보 - 정보상품(Information Commodity)¹⁹⁾ - 가 널리 등장한 것이다. 이리하여 정보 -

16) 이에 대해서는 박홍수, 김영석, 전계서, pp.163-172를 참조할 것.

17) 강명구, 전계논문, p.261.

18) 상계논문, 동면.

19) Mowshowitz는 목표추구시스템(goal-seeking system)의 결정능력이나 통제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정보라고 하면서 그 정보가 소유될 수 있고 또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어나 목표추구시스템이 어떤 형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능 - 결

특히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이용하는 능력 - 는 에너지나 원자재와 같은 하나의 주요한 자원이다.

정보는 그 어휘와 의미면에서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속성(특성)들²⁰⁾을 지니고 있다.

- 1) 비소모성 : 물질적 상품은 사용되는 그 순간부터 소모되는 반면 정보는 아무리 이용되어도 그 자체는 소모되지 않는다.
- 2) 비이전성 :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일반 상품과는 달리 한 개인이 소유하던 정보가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소유주에게는 그 정보가 그대로 남는다.
- 3) 비분할성 : 일반상품(예 : 전력, 식수 등)은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되어 공급되지만 정보는 항상 집합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된다.
- 4) 누적효과성 : 데이터베이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 축적되면 될수록 진가가 더욱 높아진다.
- 5) 기밀성 : 정보의 최대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에 의해서 비밀리에 수집, 생산되고 독점적으로만 사용되는 점유적 속성이다.
- 6) 공개성 : 정보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충분히 주지될 때에 그 효용이 최대한 발휘되는 속성이다.
- 7) 개별성 : 정보가 특정 생산자 혹은 사용자에게 효용을 줄 수 있으나 제3자에게는 효용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8) 불확실성 : 정보 자체가 확실성을 가지고 효용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능력, 통제능력 - 을 한다면 그것은 곧 '정보상품'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를 도서,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조언 서비스 등으로 들고 있다. (Abbe Mowshowitz, "On the Market Value of Information Commodities : I. The natur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commodities," JASIS, v.43, n.3(1992), pp.225-232.

- 20) 정보의 속성(특성)에 대해서는
- 김승현 편, 정보사회 정치경제학 (서울:나남, 1990), pp.271-273.
 - 민족통신연구회, 통신시장개방과 정보사회 (서울:풀빛, 1991), p.16.
 -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나남, 1993), pp.106-107.
 - 신윤식 외, 전개서, pp.49-52.
 - 윤은기, 정보전략 실천매뉴얼(서울:유나이티드컨설팅그룹, 1990), pp.26-27.
 - 이봉호, "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연구, 제2권(1987), pp. 107-110등을 참고할 것.

사용자의 정보이용의 목적에 따라 그 사용가치가 결정된다.

- 9) 신용가치성 : 정보의 구입시 정보원의 신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 10) 가치실현성 : 가공처리되어 상품화된 정보가 금융이나 유통분야에 이용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증가를 도모한다.
- 11) 문화성 : 정보는 재화로서의 의미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이외에도 한시성, 무한가치성, 무형성, 보편다재성, 매체의존성, 표현다양성, 전환성 등의 특성들을 또한 지니고 있다.

정보 통신기술이 기존의 기술과는 달리 정보와 지식을 생산, 가공, 축적, 전송, 배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래에 사회의 공공재(화)(public goods)로 인식되던 정보의 상품화, 사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Schiller는 "이러한 현상이 결코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모든 종류의 정보를 상업적 품목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은 그 정도와 폭에 있어, 컴퓨터 등장 이전 시기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욕구와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보기술은 정보의 상품화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침투의 마지막 보루인 정보 영역마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²¹⁾라고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곧 정보는 다른 일용품과 똑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내놓아지고 판매되는 상품으로 취급되며, 이것은 하나의 경제적 현실인 상업화의 특성이다. 즉 정보 그 자체가 신고전학파의 일반균형이론에 따르는 시장성 있는 재화라는 견해²²⁾에 놓여있다.

정보과학 분야에서의 최근의 진전은 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강조하는 것을 가속화 하였다. 그러나 정보과학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그것이 공공재화라는데 있다. 이때 '공공'이란 개념은 정보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재가 한 사회의 사용자 모두에 의

21) H.I.윌러, "새로운 정보기술과 문화종속," 김세원, 추광영 공편저, 정보화사회의 도전 (서울 : 무역경영사, 1987), p.233.

22) M.슈사왈라, "경제체계에 미치는 정보화 사회의 영향," 상계서, p.47.

해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기구(혹은 공공기구)의 개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음악, 연극 등의 예술활동은 순간적으로 사용되는 비내구성의 정보를 생산해 내며,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정보화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이들 예술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통례다. 기업화된 예술활동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주의 국가 역시 예술활동에 대한 재정지출은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보를 내구적 형태로 담고 있는 서적, 레코드, 비디오 등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보존, 유통시키고 있다.²³⁾

정보를 사회적 공공재로서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정보의 생산, 축적, 검색, 분배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의 가치²⁴⁾는 이제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된다.²⁵⁾ 정보상품 시장은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분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시장가격은 두 동인 간의 어떤 균형(불완전하지만)을 반영한다. 따라서 정보의 상품화에 따라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확고하게 '사용에 대한 지불원칙'(payment-for-use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²⁶⁾

전통적으로 소비자가 신문을 구입할 때는 이질적 정보를 하나의 묶음으로 사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문상품에 담긴 정보와 오락의 묶음이 35센트 혹은 50센트를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교환의 문제가 된다. 신문에 담긴 정보의 묶음을 통신망으로 연결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구입할 경우 전혀 다

23) 강명구, 전개논문, p.262.

24)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 Abbe Mowshowitz, 전개논문, pp.225-232.

· _____, "... : II. Supply Price," JASIS, v.43, n.3(1992), pp.233-241.

· _____, "... : III. Demand Price," JASIS, v.43, n.3(1992), pp. 242-248.

25) H.I.Schiller, "Critical Research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Communication, v.33, n.3 (1983), p.253.

26) Peter Golding and Graham Murdock, "Unequal Information : Access and Exclusion in the New Communications Market Place," in: Marjorie Ferguson e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Public Interest (London : SAGE, 1986), p.79.

른 교환의 메카니즘이 생겨난다. 첫째 정보묶음에 지불해야 할 대금은 통신 제공업자에 의해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통신망을 통해 이전되는 정보량에 따라서고, 또 하나는 소비자에 의한 통신 시스템의 사용시간에 따라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는 50달러 내지 150달러 정도의 회원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페이지, 단어, 비트(bit) 등으로 측정되는 정보량과 통신 시스템 사용시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²⁷⁾

이상에서 보듯이, 다양한 정보를 묶음으로 구입하는 대신에 정보과학을 통해 접근할 경우 고도로 분절된 단어, 비트 등을 단위로 구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정보의 가치는 재화로서의 정보가 지닌 내재적 속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투여되는 생산과정과 시장에서의 교환과정을 통해 발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가 상품화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식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잃고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⁸⁾

공공재로서 정보의 사회적 사용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정보가 지닌 공공적 성격이 위축된다. 즉, 정보의 사적 영역이 확대되고, 공적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육, 예술, 과학, 문화유산(도서관, 박물관) 등의 사회제도가 창출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그것이 지닌 공적 성격으로 인해 국가기구에 의해 재정적, 법률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교육의 현장에서 창조되고 분배되는 지식과 정보가 지닌 사회적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양과 지식을 갖추으로써 스스로의 개발과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판단하고 평가할 시민의 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²⁹⁾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의 공적 성격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논

27) 강명구, 전계논문, p.263.

28) 상계논문, 동면.

29) 상계논문, pp.263-264.

리에 의해서는 쉽사리 무시될 수 있다. 더욱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이 사적으로 통제되는 메카니즘 속에서 공공적 가치를 지닌 정보상품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보상품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유용성이 무시되는 상품생산의 방식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정보상품을 과도 소비하게 될과 동시에 높은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정보상품은 수준 이하로 소비하게 된다고 한다.³⁰⁾ 자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생존조건과 환경을 판단하는데 요구되는 정보와 지식은 자유화된 정보통신 시장에서는 그것이 이윤 창출을 보장하지 않는 한 생산되지도 판매되지도 않게 되는 것이다.

정보가 상품화됨에 따라 그것이 선결요건이자 필연적인 귀결로서 정보의 사유화가 실현되고 있다. 사적 기업에 의한 정보의 점유는 공공정보의 최대의 산출처인 국가의 공공정보 부문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때 사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정보서비스의 상업화는 공공자원(public resource)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재료가 제한되고, 돈을 지불했을 때만 접근을 허용할 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예를 들어, 민영 문자방송 스크린에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치가 나타난다면 문자방송의 매력은 높아질 것이다.³²⁾ 또한 한 사회가 생산한 정보와 축적된 지식의 보존과 분배를 맡고 있던 공공도서관이 통신망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정보기술과 연결되는 경우, 기술발전의 효과는 수용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저렴하거나 무료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이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만 접근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재정, 세제지원과 연구 및 개발기금 등의 국가기구에 의한 지원없이 불가능하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간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

30) Benjamin J. Bates, "Information as an Economic Good: Sources of Individual and Social Value," in: Vincent Mosco and Janet Wasc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Information* (Madison: Univ. of Wisconsin Press, 1988), p.86.

31) 최두진, 전계논문, pp.34-35.

32) 김승현, 전계서, p.168.

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적 산업구조의 개편, 정보통신의 활용을 위한 기간시설의 확보, 투자지원, 기술이전과 수입에 관한 규제조치 등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정책은 한쪽에서 보면 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기업적 정보산업을 공공정책을 통해 지원한다는 문제가 생긴다.³³⁾

이러한 산업정책과 공공정책의 혼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이윤창출에 기여할 뿐 생산된 정보가 지닌 공공재적 가치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³⁴⁾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공공적 정책지원은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국민의 문화향유와 정보의 불평등한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정책의 측면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³⁵⁾

Schiller³⁶⁾는 미국에서 정부의 정보에 대한 사적 분야의 헤게모니가 결코 결여된 적이 없었으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장메카니즘에 따라 간접적인 통제가 직접적인 통제로 이동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공공세금의 생산물인 정보 그 자체가 탄생지점에서부터 사적으로 전유되며, 이윤을 위해 팔리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독점자본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정보의 상품화, 사유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정보를 생산, 보존, 분배해 왔던 자본주의체제 내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 정부, 대학, 도서관 등 - 은 점점 사영화의 압력을 받거나 정보처리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³⁷⁾ 그 결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되던 정보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33) 강명구, 전계논문, p.266.

34) 상계논문, p.267.

35) 상계논문, 동면.

36) H. I. Schiller, Who Knows : Information in the Age of the Fortune 500 (Norwood, New Jersey : Ablex, 1981), pp.47-74. (최무진, 전계논문, p.35에서 재인용)

37) 상계논문, 동면.

제공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 정보가 가치의 원천이 되면 공공임무를 회생시키고서라도 그것을 사유화시키려는 압력이 증가한다. 과거의 공공정보 서비스가 점차 판매용 서비스로 되는 것은 이제 이상 현상이 아니다. 정보 상품화 추세는 곧 시장성이 없는 정보는 제작되지 않거나 유보될 것이다. 또한 상품으로서의 정보 생산자의 공급논리에 지배될 위험스런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르며, 정보공급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 정보들은 방치되어 이용성이 담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정보의 불평등, 불균형

사회변동에 따라 모든 활동은 정보에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접근의 문제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치 및 정보에 관한 사회과학의 관련 문헌들은 마치 커뮤니케이션의 중대가 단순히 전세계적인 상호의존성의 창출만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유통의 중대가 가져오는 효과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 문헌들은 불평등한 정보접근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국제시장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운용되게 하는지, 또는 국제적 협상 능력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³⁸⁾

유엔과 유네스코는 창립초기에 국제 사회는 정보의 자유와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고 조장한다는 목적을 스스로 설정했다. 이런 원칙은 인권과 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여러 국제 조약 문서에 엄숙히 선포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선언들은 <세계인권선언>(1948년 채택) 제19조, <시민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 채택), <국제 문화협력에 관한 원칙선언>(1966년 유네스코 총회가 선택), <평화와 국제 이해의 증진, 인권신장, 인종편견과 인종차별, 전쟁선동 방

38) 김승현, 전계서, p.263.

지 등에 관한 매스미디어의 기여에 관한 기본 원칙 선언>(1978년 유네스코가 채택) 등³⁹⁾이다.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 가능성은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이슈들 중의 하나다. 뉴테크놀로지와 함께 심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불균형 가운데 정보의 불균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디오, 흑백 TV, 영화 등과 같은 이른바 전통 미디어(old media)를 통해 우리는 정보의 소유는 테크놀로지의 소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예전의 한 보고에서 테크놀로지(여기서는 매스 미디어를 지칭)의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보획득이 많아져, 결국 테크놀로지의 빈부층간에 정보의 빈부 격차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⁴⁰⁾

정보의 격차가 테크놀로지 소유의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정보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 뉴테크놀로지와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뉴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 및 선택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부유층들에게 더욱 더 그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빈민층에게는 더욱 수혜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전통매체와는 달리 뉴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들은 그 사용법이 복잡하며, 이에 따라 개인은 그 테크놀로지들을 이용하기 위한 동기의 유발이 높아져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첨단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개인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뿐만 아니라 정보의 질 역시 개인의 재정적, 인지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인지적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지식의 불균형은 필연적인 것이다.⁴¹⁾

현존하는 국제커뮤니케이션의 거대한 양적, 질적 불평등과 불균형속에서 후진

39) 유네스코 편, 세계는 진정 새로운 정보질서를 원하는가 - 국제커뮤니케이션의 현황과 전망 (서울: 구미무역, 1981), p.70.

40) P. J. Tichenor et al.,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of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 (1970), pp.150-170. (이경자, 한균태, "정보화사회의 전환기에 있는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전게서, p.146에서 재인용)

41) 이경자, 한균태, 상계논문, pp.146-147.

저개발국들은 신음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이 간극은 심화될 수 있으며, 또한 지난 20년동안 이러한 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신국제정보질서'의 수립을 부단히 요구해오던 제3세계는 이제는 더욱 큰 '제3의물결'에 휩쓸릴 급박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에 대처할 명백한 해결책 마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⁴²⁾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다른 일용품들처럼 판매되고 있는 정보의 단순한 소비자의 상태로 격하되고 있다. 이는 Schiller가 지적하듯이 정보상품화와 용역은 미국에서 흘러나가고 있고, 테이타의 물결은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가공처리되어 미국제품으로 변하여 국제 정보상품시장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보의 원자재는 후진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입되고 이를 가공처리한 완제품은 후진저개발국으로 다시 역수출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데이터 수입국이며 정보의 수출국"⁴³⁾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유통의 일방성은 많은 비판론자들이 입을 모으듯이 상품화의 가속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고, 새로운 정보종속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테이타 처리시설이 이와같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설보유국이 어떤 정보를 유보하고 어떤 정보를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며, 정보수입국도 수출국의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⁴⁴⁾ 따라서 후진저개발국들은 증가하는 정보수요에 따라 막대한 처리업무를 선진국에 의존하게 되며, 점점 정보 종속적 지위로 굳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가 점점 지불능력에 의해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물질적인 불평등이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조연 및 여가선용 기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축소하고 정보욕구를 제한하는 시장운영

42) 추광영,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제3세계," 김세원, 추광영 공편, 전계서, p.268.

43) H.I.Schiller, 전계서, p.5 (추광영, 상계논문, pp.273-274에서 재인용).

44) Juan Rada, "The Microelectronic Revolution: Implications for the Third World," Development Dialogue, v.2 (1981), pp.42-67. (추광영, 상계논문, p.274에서 재인용)

체제가 지배적인 경향으로 되어가며, 정보를 살 수 있는 실수입에 있어서 심화되는 격차는 저소득층의 정보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사례⁴⁵⁾로 영국 텔리컴사의 Prestel 서비스가 1979년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것은 대중을 위한 공공시설처럼 인식되어서 1983년에는 가입자가 3백만이었다. 그러나 얼마후 차별화가 생겨나서 위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주로 기업계에 의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가격이었다. Prestel 이용자는 그들이 중앙 자료실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시간당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으며, 그들이 이용한 정보의 매 페이지 마다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했다. 1980년 이용자의 평균 매달 지불액은 약 35파운드였으며,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이 금액을 계속 지불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공공정보 및 여가시설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더불어 다른 서비스의 비용상승은 이에 대한 접근을 자본능력에 의존케 한다. 이런 경향은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가속화된다.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공공정보나 여가설비 이용에 돈을 쓸 수 없게 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종의 불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점점 더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상품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며, 정부의 지원이 감소된 빈약한 공공정보 시설(기본적으로 고객의 욕구충족이 불가능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⁴⁶⁾

앞에서 언급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공공적 정책지원은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국민의 문화향유와 정보의 불평등한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측면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간의 정보추구 활동 등 문화활동은 공공의 정책을 통해 계획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45) 김승현, 전계서, p.174.

46) 영국의 경우 공공정보나 조연 및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선용의 기구에 대한 수요증가를 충족시키는 일은 점점 힘들게 되었다. 이유는 정부의 공공지출비 삭감 때문에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정보 및 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이다. 소비자 상품의 특성과 범위에 있어서 복합적인 변화와 가계수입조사에 의하여 사회보장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엄청난 증가때문에 공공정보나 조연 서비스 부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Golding and Murdock, 전계논문, p.72)

정보소비, 문화활동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사된 바 있다.⁴⁷⁾ 따라서 정보기술과 정보의 상품화는 사회의 빈곤계층을 시장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될 것이며, 정보의 사회적 사용의 불평등이 지속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중요한 사회의 영향력의 근원이 되는 지식사회에서 무지는 중대한 장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사회를 지향함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지식의 불균형 문제에 기울여져야 될 필요가 있으며, 저소득층에 혜택을 늘려줄 수 있는 특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III. 정보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1. 커뮤니케이션 정책

정보화 사회를 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보(지식)가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점하며, 또한 이러한 정보가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 축적되어, 분배, 유통되고, 모든 성원들에게 정보접근의 기회가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 명제는 요망사항에 그칠 뿐 그 실현은 현실적으로 비판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모든 국가들 특히 기술을 이전 받아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질문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이 질문들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이다.⁴⁸⁾

47)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문화지표조사, 문예진흥원 연구보고서, 1987.
이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5,000명(전국에서 무선표집된) 중 61.2%의 사람들이 1년에 한번도 공공 도서관에 가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이상 도서관에 출입한 응답자 31.9% 가운데 중·고·대학생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한번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통과 문화적 정보, 지식의 보고로서 박물관과 예술전람회에 대해서는 박물관에는 약 55%, 예술전람회에는 47%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무료이거나 최소한의 입장료만 내면 이들 시설과 공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화시설의 사용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8) 박영상, "정보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 언론학보, 제7집 (1986), p.139.

그 내용은 정보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료(적절한 정보), 지식(해석된 자료) 및 지혜의 수준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또는 반대로 정보의 산술적인 증가는 정보마다 미래의 충격과 지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보소스와 정보의 다양성 때문인지의 여부, 정보시대에 있어 기술적 및 사회, 경제적 발달은 정보평등을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와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간의 더 큰 격차나 이증성을 창조할 것인가의 여부, CATV, 직접통신위성, 텔레텍스트, 비디오텍스 및 광섬유의 발명에 따라 나타나는 채널용량의 엄청난 증가는 더 많은 정치적 자유와 참여, 문화적 다원주의와 풍부함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집중화, 정치적 감시, 문화적 지배와 빈곤의 강화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은 보편적이며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면에서 민주주의에 걸맞는 문화를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화라는 환상에 대항하는 문화적 반발(cultural backlash)만을 야기할 것인가의 여부 등이다.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특정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동원시키거나 배치시키는 일련의 작업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⁹⁾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나라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될 수 있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인간 삶에 편익을 제공하는 단순한 힘을 가졌었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혁명은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시대를 일구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시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무엇보다도 정보 유통구조의 분산화에 중점이 주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⁵⁰⁾

대체로 통신매체의 시장구조는 자연스런 독점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여건하에서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봉사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정보기술의 발전을 고대하는 주된 이유

49) 상계논문, p.150.

50) 상계논문, 동면.

는 보다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쉽게 이용하고 또싼 값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전달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정책 수립자들의 실수나 무지, 몸예벤 관료주의적 관행으로 인한 독점이나 경영의 실책 등등으로부터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과 장치는 정보매체의 독점소유에 대항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와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⁵¹⁾

뉴미디어시대가 자유를 위한 정보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기술발전의 혜택이 엘리트의 이익에만 봉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기술은 주로 대기업, 군사 및 관료조직의 이익에 봉사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을 보다 집권화하며, 모든 것을 서울로 집중시키는데 기여해 왔다.⁵²⁾

국제관계에서도 정보기술은 국가간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의 바람직한 용도는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의 격차를 줄이고, 조직과 개인 및 정부와 국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틀을 규정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인 정책방안을 채택하는 국가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추세이며, 따라서 고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조치는 문화 및 정보의 교환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상이한 사회 내, 그리고 사회간에 존재하는 장벽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은 1) 국가자원을 결집시키며, 2) 현존하는 혹은 계획상의 하부구조의 조정을 강화하고, 3) 수단의 합리적인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4)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극심한 불균형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며, 5)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6) 문화적 자주성과 국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도

51) 안청시, "정보화사회와 민주주의," 김세원, 추광영, 전게서, p.44.

52) 상계논문, 동면.

움이 되며, 7) 모든 국가와 문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좀더 뛰어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⁵³⁾

지금까지 시도된 여러가지 형태의 해결방법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새롭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어느 것이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인가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국가자체 활동력을 구체화한 모든 실체의 협동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를 내리고 확립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과 정책에서 나온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반드시 자국의 국력에 의존해야만 한다.⁵⁴⁾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관계된 문제로, 외국의 원조계획은 -그것이 비록 강화되고 증대되어야만 할 경우일지라도- 독자적인 개발 정책과 국력을 동원하는 자발적 노력에 다만 보완적 기여 밖에는 할 수 없다. 이들 정책과 노력은 당연히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적 필요성 및 지역적 현실에 맞게 추구되어야 한다.⁵⁵⁾

53) 유네스코, 전게서, pp.260-261.

54) 정보기술과 국가발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 발전론적 관점 : 후진국의 발전은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속성과 태도변화의 조성 - 종래의 전통적 가치관을 탈피하여 서구적으로 개화된 근대화의 감정이입 - 이 우선될 때 근대화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발전적 성취동기를 자극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수단이 매스미디어(정보기술)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당면한 발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인 기동성을 발휘할 것이다.
- 종속이론적 관점 : 개발과 저개발의 진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중심지와 위성지로 분류하고 경제적 유통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연쇄적인 형태로 접근하며, 저개발이란 어떤 주어진 고유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산업국가들이 과거 식민지를 통해 이루어 놓은 자본의 축적과정과 동일한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자립 우선적 입장 : 후진국은 강대국의 무역압력과 기술이전에 대항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자립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국가가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립을 강조하고, 각국의 가치관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 존엄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다. 또한 중심부 국가의 독점으로 인한 주변국의 분열과 소외를 억제시키기 위해 약소국가간의 상호협력의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55) 유네스코, 전게서, p.267.

따라서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점이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 <표1>은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⁵⁶⁾

또한 White⁵⁷⁾는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원 지향'(source-oriented)에서 '이용자 지향'(user-oriented)과정으로의 변화, 정보의 공유(pool)와 국민의 공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재조직,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및 정보와 정보채널의 상품화·사유화의 지양, 또한 새로운 공공정책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권리로서 공공참여와 정보

< 표 1 >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 문 제 점 | 전 개 방 향 | 연구 및 정책 | 바람직한 결과 |
|--------------------|---|-------------------------------------|---------------------------|
| 파워 엘리트와 대중과의 양극화현상 | 집단간의 상호작용 증진 및 소수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수립 | 피드백 정치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문제의 소리 파악을 위한 연구 | 공동체적 의식의 조성 |
| 정보 및 권력의 집중화 현상 | 분산화의 요구 및 정보배분 정치의 설립 | 대중에 강조점을 둔 정보대체 수립 | 대중의 참여의식 고취 |
| 문화침해 현상 | 주체성과 자국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노력 | 선발적이고 적당한 테크놀로지 이관을 겨냥한 정책수립 | 근대화개념의 현실적인 적용. 국 가별주체성확립 |
| 매스미디어에 상업주의 오염 | 교육이나 교양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 사회교육이나 일반 교육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수립 |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균형적인 발전 모색 |
|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 감소 | 남-남 협력 혹은 지역간 협조체제 구축방안 마련 | 다원성 속에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기초 제공 |

56) 박영상, 전계논문, p.149.

57) 이강수 외, 전계논문, pp.60-62.

채널에의 접근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민주주의적 개념을 뚜렷이 표현하는데 노력한다면 정보기술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잠재적 낙관성은 국민을 위한 기술로서 사회민주화와 자유의 확대를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가능한 현실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의 공공적 가치성 회복

근래에 들어서는 여러가지 요인⁵⁸⁾으로 사회 경제활동에 있어 정보와 통신기술의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그 첫째로 지적 할 수 있는 것이 날로 복잡해지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개인과 조직의 관리 능력에 한계를 가져와 이의 극복을 위해 더욱 많은 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정책적, 행정적 또는 후생적 목적의 제반 정보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도 정보에 대한 욕구의 증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유통의 모든 측면에서 정보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 적절한 정보·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지식집약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산업부문과 사회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현안문제의 해결 즉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계층,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균질화된 정보이용의 확산과 사회복지 등에 정보,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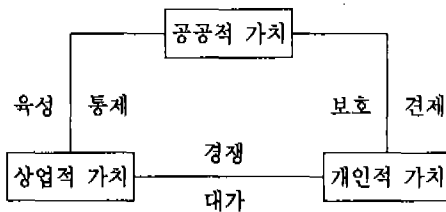
넷째, 정보통신분야의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자체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58) 통신개발연구원, 데이터베이스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정책자료 89-07, 1989, pp.1-2.

큰대 사회변화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의 생산·수요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화와 지식 집약화를 위하여, 우리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요기반의 확립과 자체사업육성을 위하여 정보이용의 활성화는 우리사회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정보는 본질적으로 공공적 가치⁵⁹⁾(public value)를 내재하고 있는데, 예컨대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 누구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요구되며 자유로운 정보유통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장려되기도 한다. 이는 곧 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환이다. 언론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접촉과 정보이용의 자유 등은 정보의 공공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정보의 공공적 가치는 그것의 상업적 가치, 개인적 가치와 현실적으로 다음 [그림2]와 같은 대립관계⁶⁰⁾로 나타나며, 정보가치의 갈등관계는 사회의 정보화가 진척되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림 2] 정보 가치의 대립 관계

오늘날의 제도적 상황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 역사적으로 공

59) H.Arent는 공공성의 본원적 의미로 '공적영역'을 들고 그 특성으로 '공개성'과 '공통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공공성이란 공적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보여지고 둘러져야 한다는 것, 가능한 한 넓은 공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J.Habermas도 Arent가 말하는 '공적영역'과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자유사회의 필수적인 토대라고 주장하면서 이 원리는 일반적인 접근가능성, 특히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특권의 배제, 그리고 보편적 규범과 그것들의 이성적인 정통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60) 전석호, 전제서, p.26.

적·비상업적 성격을 가졌던 활동의 영역에 압력을 가해 그 영역을 축소시키거나 배제시켜버리는 - 전 사회를 휩쓸고 있는 사유화의 물결이며, 특히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문화·교육·보건·경제적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¹⁾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공적권 위위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비영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정보영역들이 사유화 - 영리적인 활동으로의 전환 - 되는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보기술과 프로세스 발명, 그리고 그것의 확산·전개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이용의 폭발적 증가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자본의 추세 및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의 합리화가 진행될수록 정보라는 영역은 경제의 충추적인 지위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 결과 정보의 상품화, 사유화는 확대·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⁶²⁾

정보의 소유, 혹은 최소한 정보에의 접근이 새로운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제시되자, 정보의 축적자 및 축적물 그 자체는 새로운 투자영역을 찾고 있던 개인기업가들에 의해 석권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측면에서 예전에는 소득원으로 간주되는 일이 거의 없던 기능들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새로이 인수되어 보다 진전된 정보처리의 도움으로 재구성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제의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유화의 원천이다. 그것은 특히 정보분야 그 자체에서 매우 뚜렷한데, 오랫동안 비영리적 활동으로 남아있던 편집활동이 통합적 정보생산, 처리, 분배기능을 통해 영리적 활동으로 전환되었다.⁶³⁾

61) 허버트 쉐러, 강현두 역, 현대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 (서울 : 나남, 1992), p.63.

62) Schiller는 미국에서 정보의 상업화가 역사적으로 비영리 품목으로 간주되었고, 충분한 공적 가치가 부여된 영역으로 거의 방해받지 않고 확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 도서관을 비롯한 시민단체나 학구적 정보이용자들은 그같은 아주 강력한 반대집단에 대항해 방어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 고 지적하면서, 신정보기술의 이윤추구를 위한 응용은 정보의 자유접근 원칙의 존속을 위협하고 사회적 전문직으로서의 도서관직을 궁지로 몰고 있으며 존재 그 자체도 회의적이라 하고 있다.(Herbert I. Schiller and Anita R. Schiller, "Libraries,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erce," in: Mosco and Wasco, 전제서, pp.146-166)

63) 허버트 쉐러, 전제서, pp.72-73.

정보의 중요성과 상업성이 변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빚어졌다. 일단 정보가 판매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자 학교나 도서관, 혹은 정부 자체 등과 같이 의폐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보존하고, 분배하던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사유화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능을 상실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⁶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도 개인 정보공급자나 판매자로부터 그와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

도서관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한 정보들을 기계가독형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데, 그들은 Lockheed, 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 Bibliographic Retrieval Service 등의 상업적 판매자들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와 자신의 설비를 연결시키도록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⁶⁵⁾

도서관의 정보능력이 크게 고양된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익은 도서관의 공통적인 자유접근 정책의 포기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지불능력을 갖춘 이용자로 바뀔 때 따라 그만큼 도서관의 공적 성격은 약화된 반면 상업적 연계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가 배타적인 상업적 산물로 될 때 정보는 곧 이윤을 위해 생산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누가 그 대가를 지불 할 것인가, 그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자본능력의 기준이 정보접근을 위한 표준척도가 될 때 - 이는 정보의 제공이나 분배가 시장의 기업체에 게로 넘어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다 - 사회의 분열은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필연적 귀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전혀 부재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 본연의 속성 즉 공공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 제도적, 법적 장치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64) 상계서, p.73.

65) 상계서, p.75.

말아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오늘날 정보기술은 비약적 발전과 가능성으로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위치를 구축해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적 가능성의 이면에는 그로 인한 불평등과 불균형이 초래될 잠재성 또한 내재되어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와 영향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금까지 입수불가능했던 정보를 포함해서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방법의 다양화와 다원화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해 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그 발달이 국민간의 이해를 돕고 민주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기존 권력의 독점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새로운 정보기술은 양극화된 경제구조로의 경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택하고 실용화하는데 있어서 예견되는 주요 사회적 불균형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명백한 전략이 분명한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를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정보든지 장애없이 싼값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정보가 제한없이 차별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현된다. 그러므로 그 실현을 위해

- 1) 정보의 정치경제학 -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생산, 분배, 이용에 어떻게 권력이 그 형태를 결정짓는데 사용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사회변화를 이해하는데 특히 유익한 방법임
- 2) 가격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보기술과 서어비스에의 접근이 장차 도서관과 유사기관에 어떤 형태로 작용할 것인가의 문제

- 3) '상품화된 정보'가 문헌정보학(도서관)에서 취급하는 '정보'에 미칠 영향과 전망, 즉 문헌정보학(도서관)과 정보 상품화와의 관계
- 4) 한국의 문헌정보학(도서관)이 이론과 그 실현방법에서 '정보주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분야에 특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지만 전자도서에 대한 접근은 그렇지 못하다.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들은 전통적으로 가져온 역할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며, 따라서 정보기술의 기술적 가능성에만 호기심을 보이고 매료될 때가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연관관계와 그 상황, 효과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Information Inequality in Commercialization of and Information Technology

Lee, Soon Jae*

<Abstract>

Information, or the lack of information, is the central concern of many people. And it is now an economic resource and must be paid. An ever increasing gap will grow between information 'have' and 'have not'.

The new communications market place is a social phenomenon, and a vital key to examining changing patterns of social and cultural inequality.

There are two main arenas of action in this ongoing conflict. Inside the library system itself, a combination of forces is weakening the historic principle of free, socially underwritten access. Outside, great efforts have been exerted in recent years, by private interests, to capture the information stockpiles built up from tax-supported outlay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general governmental activities that produce data.

The for-profit application of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free access principle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information is proceeding almost uninterruptedly. It has been extended into areas that historically have been regarded as non-profit-making and endowed with a deep public interest.

This study discussed some general issues and what we should do.

* Dept. of Library Science, Dongnae Women's Junior College